

과제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방위사업 비리 근절·차단 및 효율적인 국방 획득체계 구축 ■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국방R&D 역량 확보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
총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現정부 방산비리 “0건” 등 비리 근절·차단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으며, 변화하는 기술·환경에 맞게 방위산업 정책 수행 ■ 다만, 국방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가 있어 보완 필요
'20년도 주요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방위사업 비리 사전예방 강화로 국민 불신 해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방산분야 퇴직자의 취업심사 대상기관* 확대, 방사청 출연기관의 재산등록 취업심사 대상자** 확대 등 「<u>공직자윤리법 시행령</u>」 개정(20.7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외형거래액 100억 이상 → 모든 방산업체, 200만불 이상 중개실적의 군수품무역대리업체 ** 국방부 산하 출연기관의 본부장급 이상(16명 대상) → 수석급 이상 직원(500여명) • 방위사업 비리 행위 유형화, 처벌·제재 강화, 방위사업 중개업 제도화 등을 반영한 「<u>방위사업법</u>」 개정 추진(20.9월, 민홍철 의원 발의) • 방사청 직원의 '방산업체 주식보유현황 신고' 의무를 '방산업체 주식취득 제한'으로 강화하여 방산분야 이해충돌 방지(20.10월, 방사청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 지침 제정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방 획득체계 개선으로 신속·유연한 무기체계 획득기반 조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4차 산업혁명기술(무인, VR, 인공지능 등)이 적용된 민간 제품을 군에서 시범운용 후 신속하게 전력화하는 '신속시범획득사업*' 추진(20.1월~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대상사업) 해안경계용 수직이착륙 드론, 원거리 정찰용 소형 무인기, 휴대용 안티드론 건, 소총 조준사격 드론, 전술이동통신망 중계기, 웨어러블 수중탐색 장비 등 ** '최초 기획부터 軍 납품까지의 소요기간'을 5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단축 전망 ■ 국방 R&D 역량 강화로 4차 산업혁명 선도 및 미래전장 환경 대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<u>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*</u>」 제정(20.3월)으로 도전적 연구개발 및 개방·협업 등을 위한 국방 R&D 혁신 기반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경직적 계약이 아닌 유연한 협약 방식 도입, 일부 기술개발에서 전체 기술개발로 성실 수행 인정제도 적용 확대, 국가·업체 간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제 도입 등 • 미래 군사력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8대 Game Changer(양자물리, 합성바이오, 극초음속, 무인자율, 미래통신, 에너지, 인공지능, 우주) 분야에 연구개발 집중 투자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예산(과제수) : '18년 69억원(13개) → '19년 200억원(40개) → '20년 580억원(75개) • 일반무기체계 연구·개발은 업체에서 주관하고 국방과학연구소는 비닉·비익 및 첨단기술 연구·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소 조직 재구조화(20.8월)

- 개발성과가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**국방 핵심기술 공개**(20.9월, 332건), 국방 과학기술을 민간분야에 적용(spin-off)하는 '국방기술 이전 상용화' 지원사업 추진

■ 방위산업 지원으로 국내 방산 기업 경쟁력 제고

- 「**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***」 제정(20.2월)으로 국방 중소·벤처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방위산업 진흥 기반 마련
 - *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, 국방 중소·벤처기업 지원, 고난이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 자체상금 감면 및 연구개발 기간연장 등
- 우수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치단체 및 산·학·연·군 등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'**방산혁신클러스터**' 시범사업 착수*
 - * 지역(경남·창원) 선정(20.4월), 방사청-지역 간 협약 체결(20.6월), 시설 구축(20.9월~)
- 국내 중소·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**예산* 집중투자** 등 성장단계별 (진입·성장·도약) 맞춤형 지원
 - * 국방벤처 지원사업,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, 글로벌 방산기업 육성사업 등 총 '19년 266억원 → '20년 471억원

<정부 출범('17.5~) 이후 핵심성과>

- 軍·產 유착 근절을 위한 퇴직공직자와 사적접촉 신고 의무화(18.4월) 및 방산분야 취업제한 강화(19.12월, 공직자윤리법 개정)
- 4차 산업혁명기술 등 첨단기술을 즉각 활용하여 전력화하는 '신속획득 시범사업' 도입(19.12월) 및 추진(20.1월~)
- 새로운 기술변화를 무기체계개발에 선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미래도전 기술개발제도 도입(19.2월) 등 국방 R&D 역량 강화
- 45년간 지속된 방산원가제도를 '실제 발생비용 보상'에서 '원가절감 노력에 따른 보상'으로 개편(19.12월)하여 업체의 자율적 혁신성장 유도
- 「**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**」 제정(20.2월), 「**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**」 제정(20.3월) 등 법적 기반 강화
- 방산수출지원을 위한 방사청 내 전담조직 구축* 및 지원사업 확대**
 - * 국제협력관 신설 및 방산수출진흥센터 개소(18.11월)
 - ** 찾아가는 수출상담 '다파고(DAPA-GO)' 운영(18.11월~)을 통한 지원사업 발굴

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국방과학연구소(방위사업청 출연기관) 연구자의 기술유출 정황* 등 **국가기술 유출 근절대책에 대한 이행상황 및 보완상황** 상시 점검 필요
 - * 수사의뢰·자체감사 실시(20.4~6월) 및 '국방과학연구소 방산기술 유출 근절대책' 수립(20.6월)
- 방산비리의 강력한 근절을 위해 방위사업법 개정**(20.9월 발의) 노력 강화 필요
 - * 국방위 위원 대상 설명, 쟁점에 대한 다양한 대안 검토 등